

# ‘신안 염전노예’ 또 국제사회 이슈로

### 인권·노동착취 계속 제기...주한미국대사관, 전남도에 인권간담회 요청 천일염 주요 수입국 미국 인권보고서 지적 땀 국제적 망신·수출 지장 전남경찰청도 개선 방안 간담회...민변·노동단체 근본대책 마련 촉구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이 또 한 번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 사회의 지탄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특히 미국 정부가 공정 무역을 기치로 내건 상황에서 자국 수입품목인 신안 천일염 생산 과정에서 빚어진 인권 침해 사건을 파악해 인권보고서에 담기 위한 활동을 시작하면서 전남도와 신안군에 초비상이 걸렸다. 주한미국대사관이 자국에 제출할 인신매매보고서·인권보고서 등에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의 인권 침해 사례를 언급하게 될 경우 자칫 전남도 생산 농·수산물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올랐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만 197의 천일염이 미국인 식탁에 올랐다. 이 때문에 자칫 미국대사관의 인신매매보고서·인권보고서 등에 천일염 생산 과정의 인권 침해 사례 등이 언급될 경우 천일염 수출 뿐 아니라 전남 지역 생산 농수산물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14년 발생한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은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위원회에서 “유엔 고문방지협약에서도 다룰 수 있을 정도로 인권 침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미중 무역 갈등으로 신장 위구르 사태가 터진 것은 사실이고 최근 관련 입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규제는 한국에 직접 적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그와 같은 공정무역 경향이 앞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산업계에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구적 노력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경찰청은 이 같은 점을 감안, 27일 고용노동청, 전남도 등과 ‘염전노예 척취 해결 위한 간담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공유하는 한편, 인권 침해 사례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남도도 바로 다음날인 28일 오후 장애인인권단체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법조계·시민단체들, “안일한 대응도 한뼘”=정부, 전남도, 신안군 경찰 등 관련기관들의 안일한 대응이 끊이지 않는 노동력·인권 착취 실태를 막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해양수산부가 ‘소금산업진흥법’에 정기적으로 ▲염전 현황 및 환경에 관한 사항 ▲염전 인력 및 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실태 조사에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제때 치밀하게 조사, 업주와 노동자 간 개인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개선 등으로 반영했다면 사태를 이 지경까지 방치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가.

당장, 지난해 10월 28일 박영근(54)씨는 신안군 한 염전에서 7년 동안 임금체불과 감금을 겪었다고 폭로했다. 지난 2014년 경찰이 신안군 외딴섬 염전에서 40대 장애인들이 수년간 노예처럼 혹사당하다 극적으로 구출된 이른바 ‘신안 염전 노예 사건’ 이후 발생한 유사 사건으로, ‘제 2의 염전 노예 사건’으로도 불린다.

신안군이 2014년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조례도 제정했고 경찰도 당시 ‘도서 인권보호 특별수사대’를 설치한 점을 감안하면 형식적인 조치로 잇따르는 인권 침해 사례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올만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가 지난 25일 전남노동권익센터와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로 지목된 염전주 가족은 2014년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을 받았지만 전남도는 실질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면서 “지난 7년간 전남도는 무엇을 했는가”라고 비판했다. 민변 등이 ‘염전 장애인 노동력 착취 추가 고소·고발 및 전남도의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한 이유다.

경찰은 ‘제 2의 염전 노예사건’의 업주(49)를 지난해 12월 구속해 재판에 넘긴 상태다.

전남경찰청은 이 때 10주 일정으로 노동청, 장애인단체 등과 전남지역 염전 912곳에 대한 전수 점검을 2차례 진행, 38건 의심 사례를 적발했고 이중 5건을 전남경찰청(2건)과 목포경찰(3건)에서 수사중이다. 노동청에서도 임금 체불과 관련 5건의 조사를 하고 있다. 장애 등급 의심 노동자에 대한 면담도 28건 연계해 진행 했다.

노동단체 관계자는 “염전주들은 지적장애가 있는 취약한 상황을 이용, 노동력을 착취했다”면서 “전남도와 신안군을 포함한 정부는 인신매매범죄 근절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16일째를 맞는 26일 오후, 작업 관계자들이 타워크레인에 설치된 바스켓을 타고 쏟아져내린 슬래브와 외벽 등의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실종자 발견 하루 지났는데 수색 ‘난항’

### 화정 아이파크 건축 잔해물 많고 붕괴 위험에 작업 더뎠

‘광주시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 실종자가 발견된 지 하루가 넘었지만 건축물 잔해물 많고 붕괴 위험 등으로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6일 중앙사고수습대책 본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6시 40분께 붕괴 건물 27층 2호 세대 안방 위쪽에서 매몰된 작업자의 신체 일부를 발견했지만 여태껏 실종자 구조를 하지 못하고 있다. 구조당국은 “잔해물 더미가 많고 추가 붕괴 위험이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건물 27층의 2호 세대 안방쪽부터 깨고 들어가 매몰자를 구조하려 했지만 진동으로 잔해물이 쏟아져 내릴 경우 실종자 뿐 아니라 작업자

안전도 담보할 수 없는 점을 들어 신중히 진행하면서 구조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

당국은 이에따라 28층에서 쌓여있는 잔재물 일부를 치우면서 매몰자가 있는 위치까지 접근하는 구조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국은 27층에서 발견된 실종자 외에 다른 실종자 수색도 진행중이다.

경찰의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측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사고 현장에서 근무했던 시공사측 직원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려 조사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광주 산업현장서 또 사망

### 광산구 행복주택 건설현장

### 굴삭기에 깔려 기사 숨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지역 건설 현장에서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7일부터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까지 처벌하는 게 가능해지지만 건설현장 안전불감증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광주광역시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광주시 광산구 도산동 ‘LH 광주 도산 행복주택 건설’ 현장에서 작업중이던 굴삭기 기사 A(50)씨가

굴삭기에 깔려 숨졌다.

A씨가 운전한 5t급 굴삭기는 2t 가량 무게의 맨홀을 메달아 회전하던 중 중심을 잃고 왼쪽으로 전도됐다. 당시 A씨가 운전석 문을 열어 놓고 작업을 하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A씨 외에 작업반장 등 3명의 근로자가 함께 현장에서 작업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현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하고 B건설사가 시공하는 총 공사비 101억 원, 5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신축 현장이다.

지난 19일에는 영암군 현대삼호중공업에서 작업 중이던 사내 협력사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기도 했다.

산업현장 안전불감증은 고용노동부 통계로도

확인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하반기 광주와 전남 212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3대 안전조치(추락예방 조치·끼임위험 예방 조치·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64%에 달하는 1366개 사업장에서 안전조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업종 별로는 건설업 1589개 중 1035개(65%), 제조업 525개 중 323개(61%) 사업장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한편, 광주경찰청은 오는 2월 강력범죄수사대 밑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안전전문수사팀’을 신설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한옥 리모델링 중 매몰 3명 사상

### 업체 대표 2심도 징역 1년 8개월

한옥주택을 리모델링 하다 3명의 사상자를 낸 공사업체 대표가 ‘1심 형(刑)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김태호)는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리모델링업체 대표 A(37)씨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집주인 B(55)씨에 대한 검찰의 ‘1심 형이 너무 가볍다’는 항소도 기각, 원심과 같은 벌금 300

만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4일, 준공된 지 47년이 넘은 광주시 동구 계림동 목조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공사를 부실하게 진행하다 일용직 노동자 등 모두 3명이 매몰, 2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당하는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주택을 찾기로 용도 변경하고자 대수선 공사를 진행하면서 관계기관에 신고 없이 공사를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2명의 피해자가 죽고 1명이 다치는 등 책임이 무겁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원심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전원주택 강력추천!

##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면

### 경상리 전원주택부지

■ 면적 : 456평

■ 4채 건축허가 득

■ 진입로 상수도 확보

상담 010-3675-7592